

# 전남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 58억 긴급투입

## 도, 물류비 긴급지원·생산공정 개조 등 기업 맞춤형 지원 2단계 소부장 R&D 착수·위기업종 전후방 지원 정책도

전남도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에 이어 중동 약재까지 겹친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58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우선 물류비 폭등으로 어려운 광양만권 중소 철강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

대 1000만원의 물류비를 긴급 지원했다. 이어 정부 추경을 통해 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 여수·광양에 국비 40억5000만원을 확보, 지방비를 포함한 총 58억원 규모의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예산을 추가 투입해 지원 강도를 대폭 높인

다. 기업당 지원 규모를 기존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50% 상향 조정해 기업이 경영 여건에 따라 시제품 제작, 기술 사업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폭넓게 선택하도록 했다. 특히 석유화학 기업의 원료 다변화를 위한 생산장비 개조, 철강기업의 물류 인프

고도화도 본격화한다. 지난 5년간 소부장 생태계의 기틀을 닦은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6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으로 전환된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위기산업 타깃형 선택과 집중'이 핵심이다.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I)을 연계한 융합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사후관리(3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외부 변수

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산업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전남도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한 산업 위기로 인식하고, 산업통상부와 기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변경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위기 업종 산업용 전기요금 한시적 지원, 국고 보조율 인상 등 지역 기업의 숙원을 반영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준하는 실질적 혜택을 끌어내는 것

이다. 경제 지표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특별지역' 지정 신청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 경제의 핵심 축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대외 변수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가능한 모든 행정·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지역 기업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원 기자 hoibul@gwangnam.co.kr



재단대응 안전한국훈련 11일 전남 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주차장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대원들과 특수전사령부 전문재난구조부대원들이 인명구조활동을 펼치고있다. 담양군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쌀 의무매입' 기준 확정...생산량 3~5% 초과 시 발동 농식품부, 양곡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오는 8월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에 앞서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구체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일정 기준을 넘어 정부를 초과 생산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

령안은 그 구체적인 발동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 수준이거나,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8% 하락한 경우로 설정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범위 내에서 정부 매입 여부와 구체적인 매입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 도, 가축 폭염피해 예방 대책 추진 일제 점검 현장 대응실태·예방시설 점검 등 조기 완료로 피해 최소화

전남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11일부터 2주간 가축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시군별 현장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폭염으로 전남 지역에서는 229농가에 약 37만마리의 돼지, 닭, 오리 등이 폐사했으며, 피해액은 약 51억원으로 추정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종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적기 공급과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여부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와 재해보험 가입 실적 △사군 공무 등 총 6개 사업에 182억원의 지원, 여름철 가축 사육관리와 농가 행동 요령 전파 여부 등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유덕구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가축 폭염 예방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여름철 재해(폭염·호우, 태풍 등) 취약농가 374호에 대해 사전점검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억원, 고온스트레스완화제 31억원,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 13억원, 사료효율 개선제 27억원, 낙농가 환풍기 지원 8억원,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지원 3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182억원의 지원,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강기정 광주시장 "오월광주, 민주주의 대축제로"

### 5월 정례회서 5·18민주화운동 성과·의미 공유 빛의 혁명·노벨상 수상·대중교통 무료화 등 증명

강기정 광주시장은 11일 "5월 영령들이 목숨 바쳐 지킨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 남은 숙제를 매듭짓고 2030년 5·18 50주년을 '모두의 축제'로 여는 것이 우리가 5월을 향해 바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예도'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강기정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월, 일상의 민주주의로'를 주제로 5월 정례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의 남은 숙제와 미래 구상을 제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에 전문에 넣기 위한 국민 투표가 무산되는 아쉬운 일이 있었음에도 지난 시간은 광주가 민주주의를 이끌고 세계 속에 빛나게 등장한 시간이었다"며 "민선 8기는 오월의 가치를 세계로 넓히고 '누군가의 오월'이 아닌 '나-들의 오월'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 광주 청년 시의원들의 '5·18은 누구의 것이니



강 시장은 "이러한 일들은 우리 공직자들과 시민의, 또 깨어 있는 시민들이 5월을 승화하기 위한 노력과 투쟁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광장에서 5·18기념식이 예정돼 있고,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합의를 통해 시에서 이뤄내는 등 5·18의 많은 것들이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하지만 5·18 행방불명자 찾기와 발표 명령자 규명,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옛 전남도청 운영기관 일원화, 5·18 관련자 예우 등 여전히 남은 숙제도 많다"고 짚었다. 강기정 시장은 "오월 영령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내내 울고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며 "민주주의 대축제는 가장 '정확한 예도'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5·18의 숙제들을 해결하고 50주년 오월 민주주의 대축제를 열어 '가장 정확한 예도'를 하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광주 패밀리랜드 새 운영사 찾는다 시, 29일까지 공모...우치동물원 연계 모색도

광주 대표 놀이시설인 광주 패밀리랜드가 새 출발을 준비한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복구 생육동 우치근린공원 내 유원시설인 패밀리랜드 운영사인 '광주 패밀리랜드'와의 위탁 계약이 다음 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토지와 건물, 놀이시설 등을 관리할 새업체를 찾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수타자를 모집한다. 패밀리랜드는 21필지 14만9758㎡ 토지에 40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놀이시설은 청룡특급, 쌍쌍보트, 패밀리열차 등 10종 12대를 갖추고 있으며 공모 가격은 연 5억42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위탁 기간은 7월1일부터 2029년 6월30일까지 3년이며 1회 연장 할 수 있다. 또 위탁 기간에 신규 민간투자를 추진할 경우 수타자와 시가 협의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광주시는 입찰가격과 관리 능력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광주 대표 놀이시설인 패밀리랜드는 1991년 개장해 인기를 끌었지만 시설이 낙후돼 연간 관람객이 130만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패밀리랜드는 놀이 기구가 오래됐고 투자도 이뤄지지 않아 관람객이 급속도로 줄었다"며 "우치동물원과 연계해 활성화 방안도 모색했지만 민간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업체가 선정되면 우치동물원에 계획하고 있는 판다 유치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청와대 "광주 고교생 살해...특단 대책 마련" 정부 차원 위로...필요한 지원·조치 등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광주 고교생 살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특단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10면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순찰 강화, 통학로 안전진단 및 방범 시설 보강 등을 당부했다. 고 안기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강 실장은 전선환 경청통합수석에게 "유가족과 다친 학생의 가족을 직접 만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라"고 지시했다. 안 부대변인은 "강 실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며 "유가족을

비롯해 친구를 잃은 충격과 불안 속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5일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교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서 들려온 구조 요청을 듣고 접근한 또 다른 학생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장모씨(24)를 구속, 수사 중이다. 한편 강 실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물가와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과도한 가격 인상을 차단하고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고유가 지원금 2차 18일부터 지급 시작

국민 70%에 10만~25만원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2차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簿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연합뉴스